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블랙박스 활용 젊은 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	뉴사우스웨일즈
사회·복지	4	'치매환자가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종합시책 시행	오사카
행정·교육	6	'토지불평등·식민잔재 해결' 토지 무상몰수 추진	케이프타운
환경·안전	8	'2035년까지 매립 쓰레기 비율 0으로' 캠페인	버밍엄
	10	민관협력 유휴지 활용 등으로 도심농장 체계적 육성	토론토 외
	13	지진대비 노후건물 안전도 점검·보완 지원	캘리포니아
	15	'친환경·에너지절약 건물로 개조' 지원자 모집	파리
도시계획·주택	17	'도시개발 부문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작성' 워크숍	베를린
	20	무주택 저소득층 생애 첫집 살때 계약금 '제로'	자카르타
	23	옛 교도소 '라모델로', 시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바르셀로나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런던	오도영
암스테르담	장한빛	버밍엄	정기성
베를린	신희완	피렌체	김예름
	유진경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도쿄	박재호
뉴욕	윤규근		이용원
	이수진	오사카	권용수
	이정근	베이징	박성은
	정수지	상하이	문혜정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에드먼턴	장지훈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토론토	고한나
시애틀	강민규		김용훈
시카고	김영준	보르도	김준광
스톡홀름	문선우	파리	배세진
	허윤희	시드니	정용문
바르셀로나	진광선		

블랙박스 활용 젊은 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

차량설치 지원해주고 운전기록 제공받아 표적화된 전략 수립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도시교통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25세 이하의 젊은 운전자가 사망 등 치명적인 교통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인지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 중임. 그중 하나로 젊은 운전자에게 차량용 블랙박스의 설치를 지원해주고 모든 운전기록을 제공받아 이들의 운전패턴과 특성을 파악해 표적화된 교통안전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정책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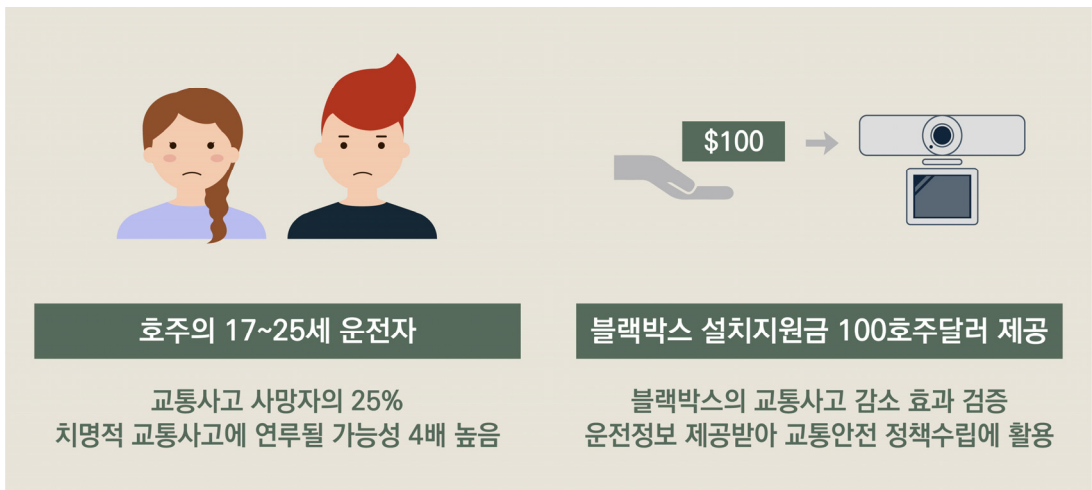
- 배경

- 25세 이하 젊은 운전자의 치명적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편
 - 전체 면허증 소지자 중 17~25세의 젊은 운전자는 15% 이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서는 약 25%를 차지
 - 또한, 이 연령대 초보운전자는 치명적 교통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26세 이상 운전자에 비해 4배 이상 높음
 - 호주의 청년 사망 원인 중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이며, 이 중 가장 큰 요인은 과속으로 알려져
- 젊은 운전자의 높은 교통사고율은 대체로 운전경험 부족과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가 원인
 - 운전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운전 중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음
 - 재정적 이유로 낡고 덜 안전한 차량을 구입하는 편이고, 부모들도 자녀의 차량을 선택할 때 안전보다는 가격, 색상, 브랜드, 모델 등을 우선하는 경향
 - 젊은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운�행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연구가 있지만, 이들의 운�행위에 관한 연구결과는 매우 제한적

- 개요

- 주정부는 젊은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 현행 면허시험 제도의 재평가, 안전한 도로이용 행위와 안전한 차량 선택 등에 관한 교육사업, 안전기록을 세운 젊은 운전자의 보상 등

- 주정부는 차량용 블랙박스(Telematics)를 활용한 젊은 운전자 교통 사고 감소 전략 수립에도 관심
 - 현재 여러 나라의 보험사가 교통사고 감소와 통제 방안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 중
 - 블랙박스는 운전자에게 운전행위에 관한 실시간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장착만으로도 교통사고를 감소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 주정부는 블랙박스가 젊은 운전자의 책임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교통사고 사망률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줄 것으로 기대



[그림 1] 블랙박스 교통안전 시범사업 개요

- 주요 내용

- 17~24세 운전자를 대상으로 ‘블랙박스 교통안전 시범사업’(Telematics Road Safety Pilot Project)을 시행할 계획
 - 첫째 목적은 블랙박스 설치가 젊은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
 - 둘째 목적은 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젊은 운전자들의 운전행위를 더 깊이 탐색하고자 함

- 신청자에게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해주고 모든 운전기록을 확보
 - 속도, 가속, 제동, 방향전환 등 기본 데이터를 비롯해 차량을 자주 운행하는 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패턴, 장거리 여행 시 휴식 정도 등 운전행위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
 - 젊은 운전자의 운전패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통안전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 신청자 1천 명에게 100호주달러(9만 원)의 블랙박스 설치 지원금 제공
 - 17~24세 운전자 중 연습 운전면허(Probationary Licence)나 정식 운전면허(Full Licence)를 소지한 사람이 대상
 - 주정부 보험규제국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설치 지원금을 제공
 - 지원금은 시범사업 참가 초기에 50%를, 종료 후에 50%를 분할 지급
 - 2018년 상반기 내에 신청이 종료되면, 2018년 하반기부터 6개월간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

<https://www.nsw.gov.au/news-and-events/news/young-drivers-to-trial-telematics-road-safety-technology>

<https://www.sira.nsw.gov.au/forms/telematics-road-safety-pilot-pre-registration>

정용문 통신원, junraphael@gmail.com

사회·복지

‘치매환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종합시책 시행

일본 오사카市 / 사회·복지

- 2025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5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오사카市는 ‘치매환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치매 서포터 양성, 지역포괄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의 치매환자 지원 종합시책을 시행

- 개요
 - 오사카市는 2018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7명 중 1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그 비율이 5명 중 1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고령자 보건 복지 계획·요양보험 사업계획’(2018~2020년)에서 치매환자 지원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치매환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시작
 - 기본방침은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치매 서포터를 기반으로 활용
 - 각 구의 ‘치매대응 강화형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계획을 추진
 - 지역 전체에서 치매환자의 지지 기반이 되어주는 치매 서포터를 양성하고 활동을 촉진

- 주요 내용
 -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보급·계몽 활동 추진
 - 2018년 3월 30일부터 ‘오사카시 치매 앱’(大阪市認知症アプリ)과 ‘오사카시 치매내비’(大阪市認知症ナビ別ウィンドウで開く) 홈페이지를 공개
 - 치매 상태에 따라 적절한 상담기관, 받을 수 있는 지원, 치매지원 지도, 치매 체크, 치매 예방, 치매 서포터 등의 정보를 제공
 - 치매 상태에 따라 시기적절한 의료·요양 서비스 지원
 - 치매대응 강화형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 치매초기 집중지원 사업, 치매 의료센터 운영, 치매병원 신설 등으로 치매의 조기진단과 대응체계 정비
 - 치매 서포터 양성, 의료·요양 전문직의 치매 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수 시행

- 청년성 치매 대책 강화
 - 청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의 취업과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치매 지역지원 추진원을 각 구에 배치
- 치매환자의 간병인을 지원
 - 예기치 못한 사유로 한동안 재택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치매환자를 요양시설에 수용
 -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 등의 만남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카페에 관련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간접지원 제공
-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
 - 치매환자가 행방불명되면 지역의 협력자에게 주변을 찾아보도록 요청하는 메일을 전송하는 등 지역 감시체계 구축
- 일본정부의 후생노동성 주관으로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요양모델을 개발하고 연구 성과를 보급
- 치매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이 기본 이념
- 치매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되도록 그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실현
- 시정부는 2018년 치매 종합시책 예산으로 5억 3,036만 4천 엔(52억 6,400만 원)을 배정

<http://www.city.osaka.lg.jp/fukushi/page/0000431968.html>

<https://www.osaka-ninchisho.jp/osakan/info/detail/1/6/0/12>

http://www.city.osaka.lg.jp/fukushi/cmsfiles/contents/0000428/428295/ninnchisyo_H30.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행재정·교육

‘토지불평등·식민잔재 해결’ 토지 무상몰수 추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市 / 행재정·교육

-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는 토지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지난 2월 27일 통과시켜 헌법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이는 중
- 배경
 - 1994년 흑백 인종분리정책(Apartheid)이 끝난 후, 공평한 경제개발과 토지개혁 정책을 시도
 - 남아공은 인구비율에서 흑인이 대다수지만, 식민지 시대가 끝난 뒤에도 소수 백인이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많은 유색인종 국민이 큰 불만
 - 토지매입위원회(Land Claims Commission)의 주도로 진행되는 토지 재분배는 주체 간 의견차이, 법·제도의 미비,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정체
 - 1999년까지 30%의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진행이 더뎠다. 2014년까지 연장
 - 남아공 의회는 지난 2008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토지 재분배를 다시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과 백인 중심 경제기관의 강한 반대로 무마
 - 2008년 당시 토지 재분배율은 5% 미만
 - 토지개혁정책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토지은행(Land Bank)이 경영난을 겪자 재정 담당부서가 변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해 토지 재분배는 더 늦어져
 - 보상없는 토지 무상몰수와 같은 극단적 토지개혁정책은 처음 시도
 - 지난 2월 비리로 파면된 전 대통령 제이콥 주마(Jacob Zuma)의 뒤를 이어 남아공 대통령에 취임한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의 영향
 - “땅을 돌려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나라와 불우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 토지개혁정책은 긴급상황이다.”
 -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 파격적인 토지 무상몰수와 재분배 정책 추진에 많은 기대와 우려가 발생

- 주요 내용

- 토지 재분배를 위해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 헌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하는 안건이 찬성 241표 대 반대 83표로 의회를 통과
 - 진보정당인 경제자유전사(Economic Freedom Fighters)가 제안하고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가 동의
- 현행 남아공 헌법에 사유재산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만 수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보상을 해주도록 명시
 - 헌법위원회는 헌법을 검토한 뒤 2018년 8월 말까지 결과를 보고할 예정
- 라마포사 대통령과 경제자유전사당은 농업활동과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토지를 개혁하는 방안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발표
- 일부 해외 언론은 남아공이 토지 무상몰수를 강행하면 지난 2000년 백인 소유의 토지를 몰수했던 짐바브웨처럼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우려
- 토지개혁정책은 남아공의 역사, 문화, 인종차별의 아픔, 정치, 경제 미래가 복잡하게 엮인 문제
 - 이번 토지 무상몰수 안건 통과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
 - 하지만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없애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정책의 추진은 많은 이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음

https://www.parliament.gov.za/storage/app/media/Pages/2017/october/High_Level_Panel/Commissioned_reports_for_triple_challenges_of_poverty_unemployment_and_inequality/Illustrative_National_Land_Reform_Framework_Bill_of_2017_with_Land_Rights_Protector.pdf

<https://www.news24.com/SouthAfrica/News/land-expropriation-without-compensation-what-you-need-to-know-20180228>

<https://www.iol.co.za/business-report/economy/land-expropriation-without-compensation-passes-in-parly-13515168>

김소망 통신원, somang0526@gmail.com

환경·안전

‘2035년까지 매립 쓰레기 비율 0으로’ 캠페인

영국 버밍엄시 / 환경·안전

- 2035년까지 매립 쓰레기 비율을 0으로 만들 목표로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거리’(Cleaner Greener Streets) 정책을 추진 중인 영국 버밍엄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직장, 기관 등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제로 히어로’(Zero Hero) 캠페인을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
- 개요
 - 제로 히어로 모델을 앞세워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주체별로 세분화된 쓰레기 배출감소와 재활용 실천전략을 홍보



[그림 1] 제로 히어로 캠페인 이미지

- 주체별 실천전략
 - 가정, 학교, 직장, 관련기관별로 세분화해 제로 히어로가 될 수 있는 실천전략을 각각의 패키지로 구성하고, 관련 팸플릿을 배포
 - 가정(Resident Pack):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구분하는 법, 가구나 가전제품을 버리는 법,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 등
 - 스마트폰 앱으로 가까운 쓰레기(일반, 재활용) 수거 장소를 안내

- 학교(Education Pack): 교사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움
 - ‘학생 제로 히어로 챌린지’(Student Zero Hero Challenge)를 개최해 학생들이 경쟁심과 재미를 느끼며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
 - 직장(Business Pack): 상업용 쓰레기 배출감소와 재활용에 관한 시정부의 서비스를 설명하고, 직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안내
 - 직장인을 대상으로 제로 히어로가 되겠다는 서명을 받는 행사를 열어 직장 내 캠페인 참여율을 높임
 - 관련기관(Partner Pack): 파트너십 기관을 대상으로 캠페인 운용 효율을 높이는 법을 안내
- 제로 히어로 캠페인 홍보
 - 버밍엄의 주요 6개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시민에게 앞서 설명한 주체별 실천전략을 설명하고 팸플릿을 제공하는 등 캠페인 참여를 독려
 -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역마다 제로 히어로 이름을 공모하고, 캠페인 부스에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퀴즈를 진행해 쇼핑 바우처를 제공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제로 히어로 모델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Cleanerbrum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게 하여 캠페인을 홍보
 - 의의
 - 제로 히어로 캠페인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이라는 주제를 시민이 쉽게 받아들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 좋은 정책으로 판단
 - 캠페인 시행 1년 후 가정용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이 26.5% 증가했고, 이 수치는 지금도 늘어나는 중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28/zero_heroes_are_coming_to_a_cleaner_greener_street_near_you

<http://cleanerbrum.org.uk>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민관협력 유희지 활용 등으로 도심농장 체계적 육성

캐나다 토론토·밴쿠버市 / 환경·안전

- 캐나다는 한랭기후의 특성과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저소득층의 수입농산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 국민의 25%가 2형 당뇨에 해당할 정도로 수입 가공식품 편중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캐나다 각 대도시는 민관이 협동하여 도심 유희지, 실내경작, 옥상정원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도심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중

- 문제점
 - 도농격차 악화와 농업인구 급감
 - 캐나다의 전체인구 중 도시인구비율은 2016년 기준 81.8%로, 1851년 최초 통계 작성 시의 13%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
 - 도시인구비율은 우리나라가 92%, 미국은 82.7%, OECD 평균이 61.27%
 - 반면, 농업인구비율은 1921년 33%를 기점으로 감소해 2006년 2%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어, 캐나다의 도농격차가 극심함을 확인
 - 불리한 자연조건으로 생산 제한, 수입 가공식품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 초래
 - 긴 겨울과 짧은 일조량으로 농업 활동이 6~9월에 편중되어 있어, 약 80%의 과일과 채소를 수입농산물에 의존
 - 전 국민의 25%가 2형 당뇨에 해당할 만큼 저소득층의 높은 수입 가공식품 의존도가 문제로 대두
 - 농업 강국 캐나다의 내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농업에 정책적 지원
 - 캐나다는 농산물 수출액 기준 세계 5위, 세계 시장 점유율 5.7 퍼센트를 차지하는 전통적 농업 강국
 -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농업의 대기업화, 빈부격차에 따른 양질의 식품에 대한 접근권 부족 등의 문제 존재
 -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민관의 도시농업 연구에 정책적 지원을 추진 중

- 주요 사례: 토론토
 - 관 주도의 전략·계획 수립과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돋보이는 토론토
 - 캐나다 최초로 식량 정책 위원회(Toronto Food Policy Council) 설립
 - 2001년 '식량 현장'을 근간으로 한 '2010년 토론토 식량 전략' 발표

- 2012년 온타리오주 법률에 따라 약 70만km²의 토지를 ‘광역 황금 말발굽 지역’(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으로 지정하고 전폭 지원
 - 텃밭 나누기, 한줄 나누기 등 저소득층 기부 프로그램과 연계
 -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법, 투수성 포장, 퇴비 화장실 등 도시농업에 특화된 농업기술 강의를 제공
 - 옥상농장 형태의 도시농업 프로젝트 ‘홈그로운’(HomeGrown)
 - 토론토 도심에 있는 라이어슨대학의 한 건물 옥상에 농장을 설치해 연간 400kg의 농산물을 생산
 - 농산물의 생산뿐 아니라 판매, 지역공동체 농장 지원, 견학·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지역공동체의 협동 모범 사례로 알려짐
 - 지역공동체의 도심농장 프로젝트 ‘검은계곡 공동체 농장’(Black Creek Community Farm)
 - 2012년 공동체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한 스타트업 형태로 설립
 - 현재는 이와 관련해 기존 도시 식량과 농경지 설계를 재고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여름캠프 등도 운영
- 주요 사례: 밴쿠버
- 민간 주도와 유휴지 활용이 두드러지는 밴쿠버
 - 밴쿠버 시정부는 도시농업을 시의 식량 정책의 주요 요소로 관리하고, 지역공동체와 전문가 그룹을 연계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발전시키는 중
 - 관내 도심농장의 매출이 2013년 기준 연간 4억 원 규모에서 현재는 7억여 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관련 산업을 성장세로 보고 있음
 - 2003년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Just and Sustainable Food System)법안 발의
 - 2009년 ‘100년 지속가능 비전’(100 Year Sustainability Vision)을 제정하면서 그린 인프라를 확대하는 시책을 발표하고, 지역 식품생산을 5가지 주요전략 중의 하나로 선정
 - 2009년 ‘민간영역을 위한 도시농업 가이드라인’에서 공동정원과 식용작물 재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
 - 시정부의 루렛 공원 도시농업 프로젝트(Loutet Park Urban Agriculture Project)
 - 지역공동체, 시정부와 대학이 연계해 시 소유 유휴지를 도심농장으로 탈바꿈

- 총괄 운영은 사회사업가에게 일임해 운영·고용 관리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하고, 판매수익만으로 일반 고용인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
- 기업 프로젝트 솔푸드(SOLE food Street Farm)
 - 2010년 13,000㎡ 규모의 도심 주차장 부지에 텃밭을 설치
 - 첫해에 4.5톤의 농산물을 생산했고, 2016년에는 평균 23톤을 생산
 - 원래부터 텃밭이 아닌 주차장, 운동장 주변 등의 공지를 임대해 10~30캐나다 달러(9천~2만 7천 원) 가격의 박스에 양질의 토양을 넣는 방식으로 조성
 - 2012년 12명을 고용해 시간당 12캐나다달러(1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고, 총 지급액이 15만 캐나다달러(1억 2,7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고용창출에도 이바지



[그림 1] 솔푸드 프로젝트의 경기장 주변 경작지

<http://clubzone.com/places/sole-food-street-farms>

An Overview of the Canadian Agriculture and Agri-Food System 2016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

Adam Drewnowski, 2010, Can Low-Income Americans Afford a Healthy Diet?, Nutrition Today, 44(6): 246-249

UN DESA's population division notes, 2014

Statistics Canada, CANSIM table 282-0088, 2009

행정자치부 인구 통계 2016

2011-2015 American Community Survey, 5-year estimates and 2015 American Community Survey, 1-year estimate

Statistics Canada, 2011 Census of Population.

Vancouver Urban Farming Censu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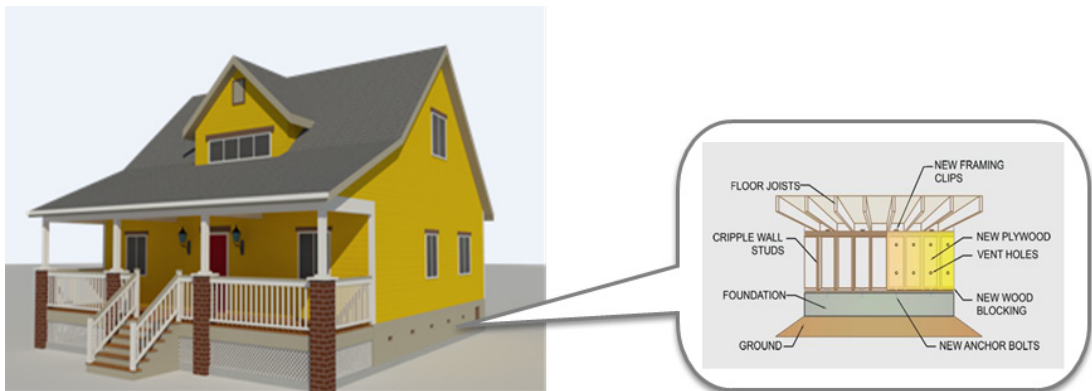
The Urban Farming Guidebook, 2013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지진대비 노후건물 안전도 점검·보완 지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 환경·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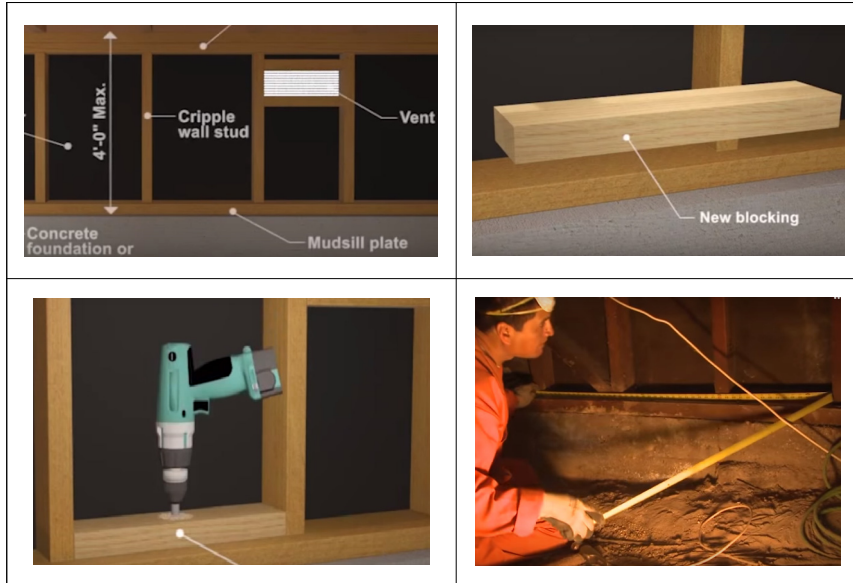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역에 걸쳐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대규모 지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이에 주정부는 일반 주택이나 사업체의 노후 건축물 안전도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안전장치의 설치를 돕는 EBB(Earthquake Brace+Bolt)프로그램을 운영
- 주요 내용
 - 주택의 지진 안전성 점검과 보완작업에 드는 비용을 주정부가 보조
 -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점검·보완을 전문업체에게 맡기는데, 일반적으로 3천~7천 달러(320만~750만 원)의 비용이 소요
 - 주정부가 이 비용을 최대 3천 달러(320만 원)까지 환급 지원
 - 건축물의 기초를 보완하고 지진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 소유자가 지속해서 건축물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는 부가적 효과도 발생
 - 전문건축가나 엔지니어의 설계 없이도 4ft(122cm) 이하의 건축물 바닥 하부공간(Crawl Space: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 아래에 환기나 기타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의 안전성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함
 - 캘리포니아주의 건축조례를 따르고, 캘리포니아주 전역을 대상으로 함



[그림 1] 주택 하부공간의 구조

자료: <https://www.earthquakebracebolt.com/HomeownerRegistration>

- EBB프로그램 지원금은 바닥 하부공간의 기초볼트나 패널 등을 보완하는 데 사용
 - 바닥 하부공간에 설치된 나무 재질의 짧은 지지대(Cripple Wall)를 보강하거나 상수도 히터를 고정하는 설비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음



[그림 2] 하부공간에 추가적인 지진대비 볼트를 설치하는 과정

자료: <https://www.earthquakebracebolt.com/Content/TheRetrofit>(영상물 편집)

- 대상 건축물은 조례에 따라 지정
 - 1979년 이전에 지어진 목조 건물, 2018년 공사 시행 예정인 건축물
 - 경사면에 지어졌거나, 기초면이 지면보다 높은 건축물
 - 바닥 하부공간의 지지대(Cripple Wall)가 4~7ft(122~213cm) 높이로 만들어진 단독주택
- 캘리포니아주 전역이 대상이지만, 주정부가 신청가능 지역을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지정하며 매년 업데이트

<https://www.earthquakebracebolt.com>

<http://abc7.com/program-helps-ca-homeowners-prepare-for-big-quake/2981731/>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친환경·에너지절약 건물로 개조’ 지원자 모집

프랑스 파리市 / 환경·안전

- 프랑스 파리市에는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오래된 건물이 많지만, 재건축이 어렵고 개조에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음. 이 때문에 시정부는 주로 서민 은퇴자가 소유·거주 중인 공동 소유주택(Copropriété)의 친환경·에너지절약 개조 공사를 우선 지원하는 ‘에코-레노봉 파리’(Éco-rénovons Paris) 프로그램을 3년간 시행 중이며, 마지막 해인 2018년의 지원자를 모집 중

- 배경

- 노후화된 건물,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 구조의 건물이 많음
 - 다량의 에너지 소비로 환경파괴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높이고 건강에도 위협
 - 그러나 재건축 사업이 일반화되어 있는 서울과 달리, 파리는 고전적 건축 형식의 건물을 보존하는 규제가 많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
- 특히 공동소유주택의 에너지절약 개조 공사가 필요
 - 공동소유주택은 한 건물을 여러 명이 나눠서 소유하고,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주택을 지칭
 - 대부분 은퇴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건물로 투기와는 거리가 멀
 - 파리 전체 주거의 75%에 달하며, 47,000여 개의 건물이 존재
 - 공동소유주택 중 90%가 에너지 관련 규정이 제대로 생기기 이전에 건축
- 이에 따라, 파리는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 절약 개조 공사를 지원하는 ‘에코-레노봉 파리’ 프로그램에 공동소유주택의 소유자 조합에게 우선권을 부여

- 주요 내용

- ‘에코-레노봉’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와 ‘개조하자’를 뜻하는 ‘레노봉’의 조합
 - 2016년부터 3년 동안만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
 - 지난 2년간 26,000가구가 혜택을 받는 등 많은 성과
- 지원자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
 - 지원자(개인이나 조합)는 개조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단, 건물 시설의 작동방식, 공동소유자들의 의지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

- 위원회는 개조 공사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환경적 이득, 공동소유자의 의지, 공사의 완료 가능성 여부라는 3가지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
 - 무료 상담과 재정지원이 주요 지원사항
 - ‘에코-레노바시옹’ 위원회가 개조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료로 1대1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고, 시의 예산으로 공사자금을 지원
 - 주로 단열과 통풍의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개조
 - 노후 창문 교체, 이중창 설치, 난방장치 교체, 통풍시스템 교체, 건물외벽 보수로 단열시스템 개선, 건물 꼭대기 한 층 증축 등으로 에너지 효율성 개선
 - 목표는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의 60%를 절약할 수 있는 건물로 개조하는 것
 - 거주자의 삶의 질을 올리고 관리비도 낮춤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부가효과 발생
 - 주요 목표는 주택소유자의 친환경적 건물 개조 장려, 환경보호, 서민 지원
 - 주택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건물의 친환경·에너지 절약 개조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노후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함
 - 서민과 중산층을 에너지 관련 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함
 - 시정부는 다른 건물 소유자보다 공동소유주택의 소유자 조합에게 우선권을 부여
 - 주택소유자라고는 해도 서민 혹은 중류층의 은퇴자가 대부분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개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 주요 성공 사례
- 파리시 18구의 스티븐슨(Stephenson)가와 제생(Jessaint)가에 있는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건물 3개 동(총 83가구 거주, 모두 공동소유주택)의 개조 공사
 - 지붕, 테라스, 외벽, 창문 등을 개조해 단열기능을 강화하고, 자동 통풍장치를 설치하고 보일러를 개선함으로써 기대했던 목표 달성
 - 공사비용의 총 44%를 지원받음
 - 해당 건물의 소유자조합 대표는 파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시의 재정지원이 없었다면 공동소유자들이 개조 공사를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

<https://www.paris.fr/ecorenovonsparis>

<https://www.paris.fr/actualites/renovation-energetique-paris-aide-les-coproprietaires-5179>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도시계획·주택

‘도시개발 부문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작성’ 워크숍

독일 베를린市 / 도시계획·주택

- 독일 베를린市는 2018년 3월 19일 도시개발 부문에 시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작성 프로젝트의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해 프로젝트의 경과를 발표하고 시민 토론을 진행해 시민참여 가이드라인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완

- 배경
 -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개발 부문에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증대
 -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도시개발 및 주택 부문에서 신규주택의 건설 수량이나 위치 등 중요한 결정사항이 늘어남
 - 새로 개편된 베를린 도시개발계획(StEP 2030)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
 - 도시개발 부문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개선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는 요청이 늘어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
 - 이번 워크숍은 2017년 10월부터 본격 진행된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프로젝트의 하나

- 목적
 - 시민참여의 요구사항, 기준, 자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참여과정의 표준과 규칙을 마련해 도시계획 부문에 시민참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도시개발, 주택, 환경, 교통, 기후 문제뿐 아니라, 지역 행정까지 포괄한 도시개발 사업 수행을 위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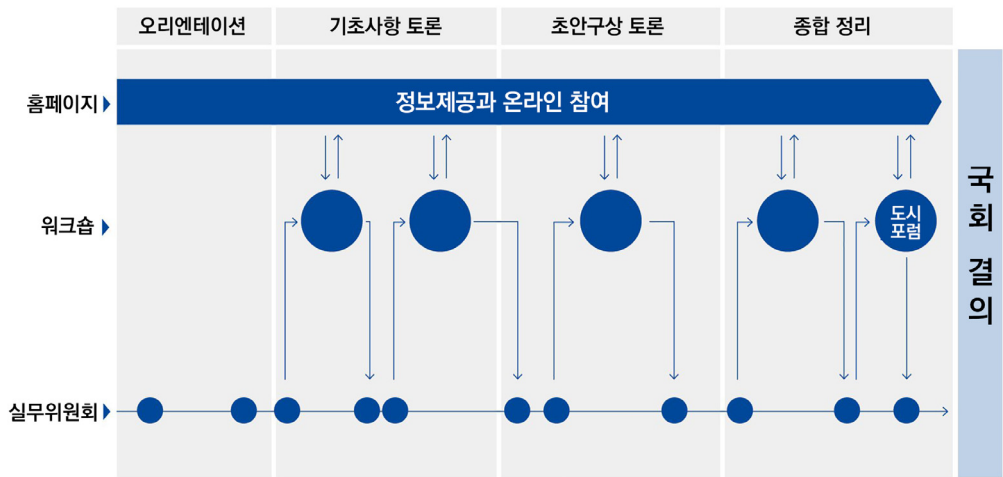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개발의 기본 질문과 접근 방법
 - 도시개발 사업정보를 언제, 어떻게 전달하는가?
 - 온라인 플랫폼 ‘나의 베를린’(mein.berlin.de)에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 시민의 참여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
 -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의견공유를 바탕으로 시민참여와 공공의 논의를 도모

- 시민참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 명확한 원칙과 형식체계를 통해 전달
- 가이드라인의 작성은 실무위원회, 공공 워크숍, 온라인 정보공개의 3단계로 진행
- 실무위원회
 - 24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시민참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
 - 실무위원회는 12명의 시민 대표와 12명의 정치·행정 대표로 구성
 - 시민 대표는 지원 신청을 받아 서면 검증을 거친 후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되, 베를린 인구통계에 근거한 쿼터제를 적용
 - 쿼터제는 성별, 나이, 지역, 이주배경, 직업활동, 교육 수준 등의 특성을 토대로 각 특성에 맞는 후보자의 비율을 실제 도시인구의 비율만큼 할당
 - 실무위원회 회의는 2017년 10월 24일을 시작으로 총 8~12회 개최 예정
 - 가이드라인을 2018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
- 공개 워크숍
 - 비공개로 진행하는 실무위원회와 달리 시민 전체를 위한 공개 행사
 - 그동안의 가이드라인 제작 상황을 발표하고 초안의 부족한 부분을 시민토론을 거쳐 보완
 - 이외에도 전문가 집단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수시민집단을 초청해 전문 지식과 소수 의견을 수렴
 - 실무위원회와 시민 간의 원활한 대화를 위한 대화 사절단(이주민을 위한 독일어 전문가 등) 참여
 - 2018년 동안 약 4회의 공개 워크숍을 계획
- 온라인 정보 공개
 - ‘시민참여 가이드라인’의 개발 과정을 온라인상에 공개
 - 중요 문건, 회의록, 워크숍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기존의 가이드라인 초안 혹은 중간 제작물에 대한 댓글과 의견 첨언이 가능하며, 새로운 토론 주제도 제안 가능
- 제1회 워크숍의 내용(2018년 3월 19일)
 - 도시개발에 시민참여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와 그간의 진행 과정 소개
 - 슬로건은 ‘도시 함께 만들어요!’
 - “온라인 참여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는 모든 베를린 시민에게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도시개발·주택 상원의원 카트린 롬프셔(Katrin Lompscher)

- 시민토론 주제
 - 앞으로 열릴 워크숍에서 시민의견과 추천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도시개발에 최대한 다양한 시민집단을 참여하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
 - 민관의 협력 가능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참여자 간의 상호 개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 누가 참여를 제안할 수 있으며, 누가, 어떻게 참여에 관한 결정을 하는가?

도시 함께 만들어요!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 개요



[그림 1]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 개요

<https://leitlinien-beteiligung.berlin.de/>

<https://www.leitlinien-beteiligung.berlin.de/mitmachen/werkstatt-i-was-ist-ihnen-wichtig/>

<http://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leitlinien-buergerbeteiligung/de/erarbeitungsprozess.shtml>

<http://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leitlinien-buergerbeteiligung/de/grundlagen-ziele.shtml>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803/nachricht6498.html

홍남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무주택 저소득층 생애 첫집 살때 계약금 ‘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도시계획·주택

- 낮은 자가주택 보유율과 주택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정부가 계약금을 선납 대출해주는 ‘제로 계약금 주택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

- 배경

- 인도네시아의 주택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문제가 급격한 도시화로 매년 악화
 - 2016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140만 호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
 - 반영 안 된 공무원·군인 가족의 주택 수요를 고려하면 실제 부족량은 더 높아
 - 연간 80만 호의 신규 주택수요가 발생하지만, 주택공급은 연 25만~40만 호에 불과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매년 악화
 - 자가주택 보유율은 2014년 기준 78.7%
- 자카르타주도 높은 수요-공급 불균형과 낮은 자가주택보유율이 고질적인 주택 문제로 자리함
 - 연간 신규 주택수요는 20만 호, 공급은 10만 호로 수요-공급 불균형
 - 공급주택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닌 부유층과 중산층 대상의 콘도미니엄 형태
 - 자가주택 보유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50% 수준으로, 임대거주가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
- 중앙정부는 주택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와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 중
 - 2016년 시작한 주택 100만 호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
 - 주택 유동성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에게 신용보증대출 기회 제공
 - 하지만 월 소득에 견줘 상당히 많은 액수의 계약금을 미리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저소득층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높은 문턱으로 작용
- 현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은 2017년 보궐선거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로 계약금 주택 프로그램’(Program Pengadaan Rumah dengan Down Payment 0 Rupiah)을 제시
 - 주지사 취임 100일째인 지난 1월 18일에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을 공식 발표

- “제로 계약금 주택 프로그램은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자카르타의 (빈부)격차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

- 자카르타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

- 주요 내용

- 자카르타 주민으로 등록된 월 소득 700만 루피아(54만 원) 이상의 만 21세 이상 무주택 기혼가구가 대상
 - 월 소득 요건은 자카르타주 최저임금 기준 월 소득(360만 루피아)의 약 2배 (부부 2인의 소득)로 책정
 - 이전에 주택을 보유했거나 정부의 다른 주택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가구는 프로그램 수혜 대상에서 제외
 - 월 소득 700만 루피아 이하 또는 최저임금 이하 가구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
- 프로그램의 대상 주택은 지가가 1㎡당 300만 루피아(23만 원) 수준으로 저렴한 외곽지역에 아파트 형태로 건설
 - 첫 시범 사업지는 동 자카르타市에 있는 폰독 클라파(Pondok Kelapa)
 - 프로그램 도입을 공식 발표한 1월 18일에 착공식을 개최하고 클라파 빌리지(Klapa Village)로 명명
 - 시영기업과 민간업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13,000㎡ 부지에 아파트 2개 동을 건설할 예정
 - 아니스 주지사의 남은 1년 반의 임기 내에 1개 동 703호의 건설이 우선 목표
 - 이 중 513호는 투룸형 구조(36㎡, 3억 2천만 루피아(2,500만 원))이며 나머지 190호는 원룸형 구조(21㎡, 1억 8,500만 루피아(1,400만 원))
- 전체 주택가격 대비 계약금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주정부에서 계약금을 미리 납부하고 구매자가 상환하는 구조
 - 주택가격 대비 계약금 비율을 현재 인도네시아 국립주택은행(BTN)에서 운영하는 1% 수준으로 최소화
 - 중앙정부의 주택 유동성 재정지원 프로그램(모기지 대출이자 연 5%, 상환기간 최대 20년)의 틀 내에서 주정부가 추가로 계약금을 대출
 - 주정부는 제로 계약금 주택 프로그램에 2018년 총 8,000억 루피아(600억 원)의 예산을 배정

- 인도네시아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인 립포(Lippo)그룹 등 민간기업도 제로 계약금 주택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을 표명

- 비판

- 일각에서는 자카르타주의 빠르게 치솟는 주택가격과 빈부격차를 고려하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존재
 - 최근 민간 부동산 업체인 Rumah123.com의 연구에 따르면, 자카르타주 밀레니얼 세대의 17%만이 월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밀레니얼 세대의 5% 정도만이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까다로운 요구조건으로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프로그램 수혜 대상에서 제외
 -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요구되는 자카르타 주민등록 절차와 700만 루피아 이상의 월 소득 등이 주된 제약요건으로 작용
- 저소득층에게 계약금만큼이나 민감한 문제인 높은 모기지 대출이자율(연 5%)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

Government of Indonesia, 2017, The State of Indonesian Cities 2017: Transformation towards Livable Cities, Jakarta: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8/03/15/07214001/lima-fakta-program-rumah-dp-rp-0-anies-sandiaga>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8/03/14/14310481/siapa-yang-tanggung-bunga-kpr-rumah-dp-0-rupiah-pemprov-belum-punya>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8/03/09/13541591/anies-program-dp-0-rupiah-bukan-sekadar-program-hunian>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01/18/anies-launches-first-housing-project-with-zero-down-payment.html>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01/22/zero-down-payment-housing-not-for-all-sandiaga.html>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7/11/22/zero-rupiah-down-payment-housing-scheme-to-begin-construction-next-year.html>

<https://coconuts.co/jakarta/news/governor-anies-officially-launches-0-payment-housing-program-groundbreaking-east-jakarta>

<https://coconuts.co/jakarta/news/survey-finds-5-millennials-jakarta-will-be-able-to-afford-house-2020-property-prices-continue-soar>

<http://jakartaglobe.id/business/no-payment-mortgage-not-possible>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옛 교도소 ‘라모델로’, 시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도시계획·주택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20세기 바르셀로나 역사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옛 교도소 ‘라모델로’(La Modello)를 시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역사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용도를 결정할 예정

- 배경

- 바르셀로나 현대사를 대표하는 옛 교도소 건물의 재생 계획
 - 라모델로는 1904년 바르셀로나 외곽에 세워진 감옥으로, 20세기와 프랑코 독재 시대에 걸쳐 많은 정치범을 수용하고 처형했던 장소
 - 다각형 형태의 중심 공간을 기준으로 6개의 회랑을 두어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파놉티콘(Panopticon: 원형감옥) 구조의 건물
- 1976년 바르셀로나 도시계획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생할 것을 결정
 - 라모델로는 바르셀로나의 아이쌘블르(Eixample) 지역 내에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
 - 2017년 6월 교도소 폐쇄 이후 시청으로 소유권 이전
- 현재 라모델로의 구체적인 미래 용도를 결정하는 시민참여가 진행 중
 - 용도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원적 사회문화시설로 모두에게 개방
 - 옛 교도소가 도시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격의 임시활동을 유치

- 개요

- 역사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재생
 - 라모델로는 아이쌘블르 지역 좌측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
 -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이 시설의 주요 재생 방향이 결정되면, 오랫동안 주민에게 외면받았던 교도소 시설이 주민 중심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
 - 주요 방향성은 녹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공공주택 등의 조성과 함께 이 장소의 역사적 중요성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전개될 예정
 - 2009년에 작성된 라모델로 마스터플랜의 초안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과정을 거쳐 수정할 계획

- 프로젝트 1: 라모델로 기념공간

- 라모델로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당시 시설을 보존하는 기념공간 마련
 - 기념공간은 옛 교도소 시설이 지니는 건축적 의미와 맥락,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설명
 -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재 시대의 억압과 정치범의 존재에 관한 설명
 - 당시 수감자의 생활상, 권리와 의무, 가족과의 관계, 처형방식, 여성이나 동성애자의 수감생활 등을 보여줄 것
- 옛 교도소 시설을 억압과 사회운동에 대한 해석 공간으로 탈바꿈
 - 기록 전시, 세미나, 교육,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

- 프로젝트 2: 시민을 위한 공간

- 라모델로의 재생은 주변지역과 단절된 폐쇄적 공간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기회
 - 폐쇄되었던 공간이 도시의 일부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과정이 필요
- 시민참여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의 사안을 결정할 것
 - 기념공간과 역사적 시설물의 보존 정도
 - 라모델로 시설의 새로운 용도
 - 라모델로가 도시 내에서 차지할 입지적 위상
- 시민참여 과정의 기본 지침
 - 1) 포용과 다양성: 성별, 나이, 직업의 다양성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계층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여성·어린이·청소년·노인에 관심
 - 2) 참여와 활성화 방안: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
 - 3) 정보의 투명성: 모든 문서는 홈페이지에 공개
 - 4) 새로운 시민참여 규정: 시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될 예정
- 지금까지 두 차례의 시민참여 토론회를 진행
 - 시민참여는 2009년에 작성된 라모델로 마스터플랜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도시 수요를 분석하는 작업의 일부
 - 결과에 따라 2020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
 - 옛 교도소 시설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안과 공공주택 건설의 2가지 안이 제출

- 5월까지 두 차례의 시민참여 토론회가 추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토론회는 녹지공간과 라모델로 시설을 주제로 진행될 것
- 현재는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 중
 - 두 달간 총 18,904명의 시민이 시설 관람, 산책, 각종 활동 참여를 위해 방문
 - 5월부터는 가이드와 함께하는 테마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울 예정
 - 라모델로를 둘러싼 담장에는 사진작가 조셉 마리아 요벳이 기록한 라모델로 폐쇄 당시의 기록사진 전시가 있을 예정



[그림 1] 시민에게 무료 개방된 옛 교도소 시설 라모델로 내부



[그림 2] 라모델로 외부 전경

http://www.barcelona.cat/infobarcelona/es/el-vecindario-repiensa-a-la-modelo_633405.html

<http://lamodel.barcelona/>

<https://www.decimim.barcelona/processes/lamodel?!locale=es>

진광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